

제3회 기업시민 연구공모전 우수논문 모음집_ 장려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지역균형발전 결정 요인 분석: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중심으로

우병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한규리

포스텍 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이호진

포스텍 융합대학원 박사과정

류연수

포스텍 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전종석


포스텍 융합대학원 박사과정

전슬영

포스텍 융합대학원 석사과정

 요약

기업시민 가치구현(Implementing Corporate Citizenship Values)은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정부 주도의 청년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가?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orporate Philanthropic Activities, CPA)이 기업과 기업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질문을 주로 다뤘었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사회적·지역적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부족했다. 본 연구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선행연구에 기여하고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청년들의 불만 해소 그리고 정부 주도의 청년 관련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7개 시도에 포함된 228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행해지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지역에서 청년과 관련해 표출되는 민원의 내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며 그 수 역시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나아가,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과 관련한 정부 지출액의 효율성 역시 증진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기존 문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지역공동화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기업시민 가치구현, 청년 지역 정착, 지역균형발전, OLS회귀분석

I. 서론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정부 주도의 청년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하는가?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중요성이 부상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후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박원우 외., 2020; 윤각 & 서상희, 2003; 정희수 & 조상미, 2021; 최운열 외., 2009). 학술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기업들 역시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

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23년 2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출액이 증가한 기업은 50%를 상회하였으며 조사 대상 기업 중 26.5%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출액을 25%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기업들이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투자하는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순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보편적으로 대중들이 가진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크게 개선한다는 점이 다양한 연구에서 밝혀졌으며 (박상록 & 박현숙, 2013; 이원우 & 하홍열, 2022), 기업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의 직무만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김양환 & 임준형, 2022; 김용식 & 김정신, 2020).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강제성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다르게 발현되기는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임직원들의 조직 신뢰와 조직몰입을 증진한다는 연구 결과 또한 발견되었다 (정수철 & 조영복, 2020). 이렇듯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사회공헌활동의 순기능을 기업의 차원에서 그리고 조직 구성원의 차원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에 더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영향력을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과 측정방식 또한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배성호 & 신수진, 2020).

다만, 기존 연구들이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이해를 증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사회적·지역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연구의 부재는 예상 밖이다. 본 논문은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기존 연구에 기여하고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사회적·지역적 차원에서의 순기능을 분석하고자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성공적인 지역 정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나아가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 주도 청년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함께 탐색함으로써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직접적 영향력에 더해 간접적 영향력 또한 검증하고자 한다. 통계분석에 포함되는 분석 대상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기업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본 논문은 그동안 심도 깊게 연구되지 않았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리나라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Ⅱ. 선행연구 검토”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선행연구의 한계에서부터 본 논문이 가지는 의의와 기여점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이어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과 성공적인 지역 정착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Ⅲ. 이론과 가설”을 소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 효율성의 영향력을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과 가설 역시 서술하고자

한다. “IV. 통계분석 및 결과”에서는 본 연구에서 진행한 통계분석에 대한 전반적 기술,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에 대한 설명, 분석 모형과 결과, 그리고 해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 종합과 함께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의 방향성에 관해 서술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기업시민 가치구현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 역할과 순기능이 지속해서 연구되고 있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회공헌과 관련한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기업의 수와 사회공헌 지출 규모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지속되었으며 세전 이익의 1% 이상의 규모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하고 있는 기업은 50%를 상회하고 있다 (김대원 외., 2022). 비록 모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도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그 적실성과 효율성에 있어 장기간의 발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유태균 외., 2021), 2004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서인 ISO 26000 (Guidance on Social Responsibility)가 발간되면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 내외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가지는 영향력과 결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원우, 하홍열(2022)은 인터넷 쇼핑물 환경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단순무작위추출법을 활용하여 인터넷 쇼핑물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신뢰도와 정직성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발견했다. 또한 박상록, 박현숙(2013)의 연구에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이미지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마케팅 이미지와 미래 이미지, 그리고 사품 이미지와 CEO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결과적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외의 다양한 연구에서도 기업 이미지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간의 관계성이 지속해서 입증되었다 (윤각 & 서상희, 200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업가치와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연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배수현(2020)은 우리나라 35개 금융기업에 대한 GLS모형을 활용한 분석을 진행하여 금융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지수가 매출액 규모와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

함으로써 매출액 증가율의 효과가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인해 증가한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금융기업 이외에서도 이러한 관계성이 드러난다. 최운열 외. (2009)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비금융업 상장기업에 대한 임의효과 패널분석을 진행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해 기부금 지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연구들도 존재하지만 (정희수 & 조상미, 202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증거가 계속해서 도출되고 있다 (김형구 & 최종윤, 2011; 이중원 & 박철, 2020).

기업 차원에서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순기능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다. 정수철, 조영복(2020)은 D-중공업의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설문분석을 진행한 결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임직원들의 조직 신뢰를 증진함과 동시에 직무만족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 관련성을 지님을 규명하였다. 보다 최근에 진행된 김양환, 임준형(2022)의 연구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공무원들의 직무만족과 공공봉사동기 모두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김용식, 김정신(2020)은 광주, 전남, 전북의 직장인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통해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임직원들의 직무만족과 신뢰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조직 몰입 역시 촉진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앞서 서술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미치는 여러 영향력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선행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불만해소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정부 차원의 청년 관련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다양한 사회적·지역적 순기능을 할 수 있으나 (손지은, 2020), 연구의 대상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불만해소 그리고 정부 주도 정책의 효율성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2013년 이래로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다. 1980년 6.1이었던 노년부양인구비는 2020년 21.8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2070년에는 100.6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소영, 2023). 우리나라 초저출산 현상은 총 인구의 가파른 하락세로 연결되었다.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인구 감소율은 -0.65%이며, 인구가 증가하는 46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182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는 청년인구를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2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 소멸위험지역은 총 113곳으로 절반 가량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이명애, 2023). 특히,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

구 감소는 심각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발견된다. 영국은 1930년대 대공황을 겪으며 지역 격차가 심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1944년 런던 계획에 수도권 규제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업 및 사무실 개발 허가제, 공공기관 이전정책, 중앙부서의 지방이전 추진 등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1971년부터 2004년까지 인구증가배수가 전국 1.07배, 런던권 1.08배로 나타나, 런던권 인구 과밀문제는 사실상 해소되었다 (김용국 & 손용훈, 2012). 1940년대의 프랑스 지역 불균형 문제는 파리와 프랑스의 사막이라고 묘사될 정도로 심각했다. 1960년 파리권 종합계획 수립, 1963년 국토균형개발청 설립을 통한 지방 중심도시 육성 정책 추진을 통해 1990년대 후반 이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될 수 있었다 (배준구, 2006).

이렇듯 지역 간 불균형이 완화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에서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가 지역균형발전 저해의 주된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다. 지역의 낮은 고용률과 의료 및 교육 인프라의 부재와 같이 청년인구의 유출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결정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 역시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으나 (강유미, 2022; 김리영, 2019; 홍성호 & 유수영, 2012), 연구 대상 시기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Woo & Bae, 2023). 중앙·지방 정부 또한 지역에서의 일자리 확보, 여가 및 문화 시설 확충, 환경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시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사회적·지역적 순기능을 측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에서 청년인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역할에서 찾고자 한다.

III. 이론과 가설

본 논문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해소에 미치는 순기능, 나아가 정부 주도의 청년 관련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경제이론에 근거하여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의 성공적 지역 정착과 불만 해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을 사회경제이론(Social Economy Theory)을 통해 이론화하고자 한다. 사회경제이론에 따르면 지역 소재의 기업은 중앙정부에 비해 청년인구를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사항과 인프라와 관련한 요구사항에 대해 보다 높은 이해도를 가진다고 연구되고 있다 (Ko, 2012). 지역에 대한 이해와 주

민과의 친밀한 관계가 해당 지역에서의 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인이기에 기업이 정부에 비해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전개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기 때문이다 (Krykun et al., 2017).

물론, 모든 기업이 지역민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하지만, 보편적으로 기업들은 중앙 정부에 비해 지역 청년과 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추진하고자 한다 (Uduji & Okolo-Obasi, 2019). 우리나라 주요 기업에 대한 2022년 사회적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사회공헌 인식 및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과 관련하여 기업들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시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지역 발전 기여도를 가장 우선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범 외., 2022).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포스코(POSCO)가 2018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지역에서의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지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비단, 포스코 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KT 등이 희망 소학교를 건설하거나 저소득층 청소년 및 소년소녀 가장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지역의 활성화와 청년 인구의 유입 그리고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 역시 지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이를테면, Jarmusevica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라트비아와 불가리아를 대상으로 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해당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Uduji et al.(2019)는 나이지리아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지역에서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하는 것이 해당 지역의 청년 고용률을 증진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지역 청년 인구 유치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성군에서 포스코의 기업시민 가치구현과 연계하여 원룸식 청년주거 시설을 조성하고 이를 의성군에 전입한 청년에게 제공함으로써 청년 인구의 유입을 장려한 바 있다 (유정규, 2021).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또한 해당 활동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표출되는 청년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표적으로 청년들이 지역 정착을 위해 가장 크게 고려한다고 연구되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해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2023년 발간한 사회공헌백서에 따르면 기업의 주도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청년 대상 직업 교육과 창업 활동에 대한 지원이 2020년 3.5%에서 2021년 7.2%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적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 SK, 그리고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이 지역에서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청년 인재들을 육성하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최재호, 2014). 해외 사례에서도 역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지역

에서의 청년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다. Moulali(2019)는 인도 소재의 기업들의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분석하여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지역 차원에서의 청년들의 실업과 교육 격차와 같은 주요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불만을 봉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보다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렇듯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술한 사회경제이론과 실제 사례에 기반을 두어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와 함께 아래의 두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Ceteris Paribus),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가설2]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Ceteris Paribus),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청년들의 지역과 관련한 불만해소로 연결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해소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검증함에 그치지 않고,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 주도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해서도 검증하고자 한다. 지역에서의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중앙·지방정부는 지방소멸과 청년인구유출에 대응하고자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시해왔다(임태경, 2023). 그런데도, 청년인구의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으며, 정부 주도의 청년 정책의 효과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중앙·지방정부의 청년 정책의 효과는 그 독립적인 영향력만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다(정주호 & 조민호, 2018). 그러나 현실에서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조건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러한 요인들을 과학적으로 파악해야지만 정부 주도 청년정책의 효과성을 체계적으로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지방정부의 청년 정책의 성패는 단순히 정책의 내용에서만 비롯되지 않으며 지역의 특성과 환경 그리고 기업과의 관계 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Evans(1996)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적 관계와 공동된 지향점은 정부 차원의 정책에 대한 상보성(Complementarity)으로 발전하여 정부사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시너지효과(Synergy Effects)로 발현된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에서도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십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 사회적 투자의 효

울성을 증진할 것이라 명시하고 있다 (윤수인 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간접적으로 정부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할 것이라 아래와 같이 기대한다.

[가설3]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Ceteris Paribus), 기업시민 가치구현은 정부 주도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을 증진한다.

IV. 통계분석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과 관련한 불만 해소와 지역 정착에 미치는 영향력과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한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영향력에 대한 통계분석에 입각한 접근 방식은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확장성을 확보함에 있어 상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Fearon & Laitin, 2008).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영향력에 대한 선행 연구가 보편적으로 사례분석과 같은 질적 접근방법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통계분석을 활용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대상은 17개 시도에 포함된 228개의 지방자치단체이며 분석에 포함된 시간은 2019년부터 2022년이다. 따라서 분석단위는 “지방자치단체-년도”이다. 이어서, 분석에서 활용된 변수들의 조작화와 자료원에 대해 서술하겠다.

4-1. 변수 및 데이터

4-1-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총 세 가지의 종속변수를 활용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영향력을 검증한다. 먼저,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서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의 청년 인구 비율을 첫번째 종속변수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인구는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에서 제공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를 활용했다. 20~34세 인구 수를 각 단체의 총 인구수로 나누어 그 비율을 구했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청년 관련 민원 수와 민원에서 표출된 긍·부정 감정의 평균 점수를 활용한다. 두번째 종속변수인 지역별 청년 관련 민원 수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민원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했다. 민원 빅데이터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대해 가지

고 있는 고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다방면의 연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김성표 외., 2015; 박주섭 & 이새미, 2020; 최해옥, 2016). 민원 빅데이터에는 민원이 접수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정보와 분야 등의 정보가 함께 제공된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49,759,991개의 민원을 수집하고 휴대폰 번호와 민원 접수인 성명 등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제거한 뒤, “청년” 키워드를 포함한 청년과 관련한 민원 206,479개를 선별하였다. 이후 지역별 인구수에 비례한 청년 관련 민원의 수를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세번째 종속변수인 민원에서 표출된 감정점수를 산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민원에 대한 감정분석(Sentiment Analysis)을 실시했다. 감정분석은 텍스트에 표출된 작성자의 감정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정량화하는 분석기법으로 텍스트분석에서 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분석기법이다 (Bae et al., 2023; Jamil et al., 2022; Lee et al., 2022). 본 연구에서는 딥러닝 알고리즘(Deep Learning Algorithm)에 기반을 둔 LSTM(Long Short-Term Memory) 감정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개별 민원들의 감정을 분석했다.

LSTM 모델은 기존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던 RNN 감정분석 모델의 문제점인 장기의존성(Long-Term Dependency)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모델로 계산의 양에 따른 과적합이 발생할 확률 또한 적다고 연구되고 있다 (김동현 외., 2022; 임명진 외., 2020). 본 연구에서는 민원에 작성된 명사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전처리(Pre-processing)과정에서 조사 등을 포함한 민원 내 불용어는 감정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LSTM을 활용한 감정분석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값은 0(부정)에서 100(긍정)의 범위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별 민원들의 결과값을 모두 더한 뒤 이를 지역별 민원 수로 나누어 그 평균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했다. 상술한 세가지 종속변수들을 활용해 가설 3 역시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4-1-2. 독립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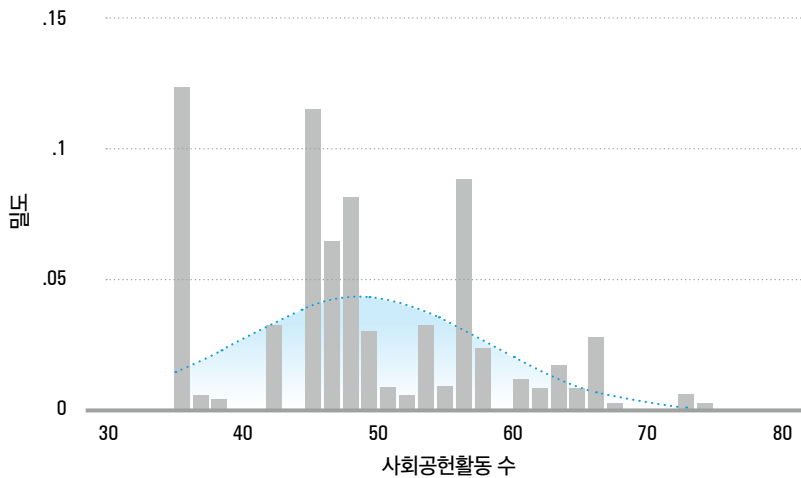
연구에서 활용되는 독립변수는 기업들의 228개 지방자치단체별 사회공헌활동 수이다. 분석 대상 기업은 분석기간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종합주가지수(KOSPI)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기업을 선정하였다.¹ 비록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사회공헌활동의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는 선행연구가 존재하지만 (정희수 & 조상미, 2021),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보다 상위 20개 기업

¹ 분석에 포함된 상위 20개 기업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NAVER, LG화학, 삼성SDI, 현대차, 셀트리온, 카카오, 기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POSCO홀딩스, 카카오페이, 현대모비스, POSCO, 크래프톤, 삼성물산, KB금융, 카카오뱅크다.

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유는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해당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를 명확하게 관측하고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규모가 작은 기업을 분석에 포함할 경우 관측되지 않는 사회공헌활동의 수가 증가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통계분석 시 사회공헌활동의 영향력을 과소추정(Underestimation)하거나 과대추정(Overestimation)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상위 20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업들이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사회공헌활동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각 사회공헌활동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공헌활동 수를 합산하였다. 전국적으로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이루어진 사회공헌활동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된 사회공헌활동 수에 누적 합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수집과정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존재하지 않는 년도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공식 사이트와 뉴스 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 및 보완하였다. <그림 1>은 분석에 활용된 사회공헌활동 수의 전반적인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 1. 사회공헌활동 수 분포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 해소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조절효과(가설 3) 역시 상호교차항(Interaction Term)을 통해 함께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서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액을 추가적인 독립변수로 활용한다. 지방자치단체별 청년 관련 정책의 정부 지출액 자료는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수집되었다. 지방재정365에서 제공하는 상위 8개 카테고리(교육,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문화 및 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중소기업, 일반공공행정)에 대한 지출액을 수집하여 청년 키워드를 포함한 재정

의 총합으로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4-1-3. 통제변수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종속변수들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해소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가장 먼저,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지역의 평균 고용률을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생애주기단계에서 청년들은 지역 이동과 정착을 고려할 때 지역의 일자리의 유무와 전반적 고용률을 고려한다고 연구되어왔다 (김리영, 2019; 김리영 & 양광식, 2013; 이찬영, 2018; 이찬영 & 문제철, 2016).

김리영(2019)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에 미치는 요인들을 회귀분석하여 고용률에 따라 청년인구의 유입이 증가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이찬영, 문제철(2016)은 광주와 전남지역의 인구유출을 살펴봄으로써 고용여건이 주요한 결정 요인임을 밝혀내었다. 국내의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의 연구에서도 고용률의 중요성이 지속해서 입증되고 있기에 (Davies, 2008; Kharashvili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고용률을 통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별 평균 고용률에 대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에서 수집되었다.

미충족 의료율과 건강인지율 또한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지역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은 주민들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고 있다 (신자은, 2013; 황종남, 2017). 김화연, 이대웅(2022)은 생활 인프라 중 보건 및 의료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청년 인구의 지방 정주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비록 청년 인구의 이동에 미충족 의료율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미충족 의료율이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충족 의료율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홍성효 & 유수영, 2012).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미충족 의료율과 같은 객관적인 의료율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역시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만족에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 역시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Mahendran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결과에 바탕하여 건강인지율을 미충족 의료율과 함께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미충족 의료율과 건강인지율의 영향력은 자료원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김소애 외., 2019),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다른 자료원을 활용하기 보다는 국가통계포털을 기준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미충족 의료율과 건강인지율에 더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유아 천명당 보육시설 수 역시 통제변수로 포함했다. 보육시설의 차이는 청년 인구의 지역 간 이동과 정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준다고 연구되어왔다. 김리영(2019)의 연구에서 보육시설의 차이는 인구 유입에 양(+)의 영향력을 준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보다 최근 연구인 기윤환(2022)의 연구에서도 보육시설의 유무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요한 주거 선택 요인이었음이 드러났다. 자녀가 없는 청년들과 신혼부부의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시설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누락 변수에 따른 통계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보육시설 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의미하는 재정 자립도 역시 청년들의 지역 이동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되어 왔다 (강유미, 2022; 최형재, 2022; 허만형, 2021). 강유미(2022)의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청년 인구의 유입을 장려한다는 점을 발견되었다. 비단 청년 인구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전체 인구의 유출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지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김리영 & 양광식, 2013; 이찬영 & 문제철, 2016).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어 본 연구에서도 재정 자립도의 영향력을 통제하여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에 미치는 독립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총 인구수의 영향력 역시 통제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누락 변수에 의한 편의(Omitted Variable Bias, OVB)를 최소화하고자 광역자치단체와 개별 년도에 대한 임의효과(Random Effects)를 분석 시 포함했다. 광역자치단체와 개별 년도에 대한 임의효과를 포함시킴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와 연도별로 상이한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독립적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했다. 임의효과는 고정효과(Fixed Effects)와는 달리 모형의 자유도(Degree of Freedom)을 극단적으로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고정효과가 아닌 임의효과를 활용했다 (Bell & Jones, 2015). <표 1>은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준다. 총 관측치는 지방자치단체 228개와 분석에 포함된 년도 수인 4를 곱한 912개이다.

표 1. 기술통계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청년인구 비율 (%)	912	16.388	4.383	8.053	33.610
청년 민원 감정	912	46.988	14.396	0.000	99.430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	912	0.014	0.107	0.000	1.776
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 수	912	48.709	9.021	35.000	75.000
청년 관련 정책 정부 지출액	912	346.126	388.935	1.009	2698.367
통제변수					
고용률	912	69.324	5.761	57.000	87.500
미충족 의료율	912	6.084	3.192	0.200	21.300
건강인지율	912	49.433	7.978	29.700	79.400
보육시설 수	912	16.631	3.511	4.100	29.000
재정자립도	912	19.930	12.026	4.000	68.900
총 인구수	912	226706.900	224215.500	8867.000	1194465.000

4-2. 통계분석 모형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세가지 종속변수가 모두 연속형 변수이기 때문에 가설 검증을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s)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분석을 실시했다. 분산팽창계수 분석은 회귀분석을 진행할 때 문제가 되는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Alin, 2010). 분산팽창계수의 분석 결과 평균 VIF계수와 독립변수 그리고 통제변수들의 개별 VIF계수가 4.00 이하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수 간 공선성이 낮으며 통계결과를 왜곡할 만큼의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Allison, 2012).

표 2. OLS회귀분석 결과

	모형 1	모형 2	모형 3
	청년인구 비율(%)	청년 민원 감정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
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 수	0.164*** (0.025)	0.043* (0.020)	-0.001* (0.000)
청년 관련 정책 정부 지출액	0.001*** (0.000)	0.004* (0.002)	-0.001* (0.000)
통제변수			
고용률	0.247*** (0.019)	0.023* (0.010)	-0.002** (0.001)
미충족 의료율	0.011 (0.030)	0.082 (0.176)	-0.001 (0.001)
건강인지율	0.022* (0.011)	0.105 (0.078)	0.000 (0.001)
보육시설 수	0.031* (0.015)	0.168 (0.164)	-0.001 (0.001)
재정자립도	0.124*** (0.011)	0.048* (0.023)	-0.001* (0.000)
총 인구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지역별 임의효과	0	0	0
연도별 임의효과	0	0	0
상수	20.249*** (2.237)	39.792*** (10.464)	-0.208** (0.076)
관측치	912	912	912
AIC	3547.219	6250.718	-1134.489
BIC	3602.739	6306.239	-1078.968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괄호 안에는 표준편차가 기입되었으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는 모형 간의 설명력 비교를 위해 제시되었다.

<표 2>는 OLS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독립변수인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회공헌활동 수는 세가지 종속변수인 청년인구 비율(%), 청년 민원 감정,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모형 1에서 사회공헌활동 수는 $p < 0.001$ 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베타계수는 0.164로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할 때마다 청년인구의 비율이 0.164% 증가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양한 통제변수와 지역별 임의효과 그리고 연도별 임의효과의 영향력이 통제되었을 때의 결과이지만, 이러한 수치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단순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 역시 유의미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모형 2의 결과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할 때마다 청년 관련 민원에서 표출되는 감정이 긍정적

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모형 3에서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지역에서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한다면 -0.001만큼의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가 감소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비록 모형 3의 사회공헌활동 수의 베타계수가 모형 1과 모형 2보다 그 수치가 낮지만,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의 평균값이 0.014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무시할 수만은 없는 수치다. 위와 같은 발견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첫번째 가설과 청년들의 지역과 관련한 불만해소로 연결된다는 두번째 가설을 뒷받침한다.

정부가 청년과 관련한 정책에 지출하는 비용 역시 세가지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활동 수의 베타계수와 비교해보았을 때 지출액의 변화가 야기하는 청년인구 비율과 청년과 관련한 민원에서 표출되는 감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은 보다 낮았다.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속해서 비판하고 있는 정부 주도 청년 정책의 비효율성을 반영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김용현, 2016; 오민지 & 안선민, 2022), 이와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밀접한 관계 속에서 실시되는 사회공헌활동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통제변수들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점이 도출되었다. 먼저, <표 2>에 제시된 세가지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통제변수들은 고용률과 재정자립도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률과 재정자립도가 증진될수록 해당 지역의 청년인구 비율은 증가하며, 청년과 관련한 민원에서 표출되는 감정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고,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가 감소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고용률과 재정자립도가 청년인구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들의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강유미, 2022; 김리영, 2019; 이찬영 & 문제철, 2016; 최형재, 2022), 지역 수준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지역의 고용률과 재정자립도와는 달리 미충족 의료율은 세가지 종속변수들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발견은 비록 본 연구의 예상과는 다른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와 고용률에 비해서 미충족 의료율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 간 이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Woo & Bae, 2023).

건강인지율과 보육시설 수는 모형 1에서만 95%의 유의확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민들의 주관적인 건강인지율과 보육시설 인프라가 청년들의 정주 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기윤환, 2022; 김소에 외., 2019).

그러나 모형 2와 모형 3에서 건강인지율과 보육시설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건강인지율과 보육시설 수가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청년과 관련한 민원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표 3. 상호교차항을 포함한 OLS회귀분석 결과

	모형 4	모형 5	모형 6
	청년인구 비율(%)	청년 민원 감정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
독립변수			
사회공헌활동 수	0.166*** (0.027)	0.085* (0.040)	-0.001* (0.001)
청년 관련 정책 정부 지출액	0.001*** (0.000)	0.021** (0.008)	-0.001* (0.000)
독립변수 간 상호교차항	0.002* (0.000)	0.001* (0.000)	-0.001* (0.000)
통제변수			
고용률	0.247*** (0.019)	0.050* (0.024)	-0.002** (0.001)
미충족 의료율	0.011 (0.030)	0.08 (0.176)	-0.001 (0.001)
건강인지율	0.023 (0.015)	0.115 (0.078)	0.000 (0.001)
보육시설 수	0.030* (0.015)	0.159 (0.163)	-0.001 (0.001)
재정자립도	0.124*** (0.011)	0.054* (0.026)	-0.000* (0.000)
총 인구수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지역별 임의효과	0	0	0
연도별 임의효과	0	0	0
상수	20.107*** (2.325)	31.225** (11.086)	-0.233** (0.081)
관측치	912	912	912
AIC	3549.167	6247.543	-1133.335
BIC	3609.314	6307.69	-1073.187

주: * p < 0.05, ** p < 0.01, *** p < 0.001. 괄호 안에는 표준편차가 기입되었으며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는 모형 간의 설명력 비교를 위해 제시되었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지역 청년인구의 변화와 청년들의 성공적인 지역정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더해,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교차항을 포함해 OLS회귀모형을 추정하였다. <표 3>은 가설3을 검증하기 위해 상호교차항을 포함한 OLS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주요 독립변수인 사회공헌활동

수 및 청년 관련 정책 정부 지출액은 여전히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추가된 사회공헌활동 수와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지출액의 상호교차항 역시 세가지 종속변수와 모두 $p < 0.05$ 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모형 4와 모형 5에서 상호교차항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베타계수는 각각 0.002와 0.001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단위 1만큼 증가하였을 경우 정부 지출액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0.002와 0.001만큼 증가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수치상으로는 보았을 경우에는 그 차이가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정부 지출액의 독립적 영향력이 0.001 그리고 0.021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호교차항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 6에서는 상호교차항이 -0.001의 베타계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할수록 정부 지출액이 청년 인구 대비 청년 민원 수를 0.001만큼 더 감소시킨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공헌활동이 정부 차원의 청년 정책 관련 지출의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가설3을 뒷받침한다.

또한 <표 3>에서 통제변수들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비록, 추정된 베타계수는 조금씩 변화하였지만 기본적인 유의미성과 방향성은 변화하지 않았다. 고용률과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모든 종속변수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는 달리, 미충족 의료율과 건강인지율은 어느 모형에서도 유의미한 관계성이 도출되지 않았으며 보육시설의 수는 청년인구 비율(%)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표 2>와 <표 3>의 결과에서의 유사성은 본 연구에서 추정된 통계모형의 결과가 강건성(Robustness)을 갖는다는 점을 반증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그동안 부재했던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지역과 관련한 불만 해소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분석을 진행했다. 22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통계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인구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과 지역에서 청년과 관련해 표출되는 민원의 내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또한 민원의 수와 관련해서, 사회공헌활동 수가 증가할수록 지역의 청년 인구에 대비한 청년 관련 민원의 수 역시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업시민 가치구현과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대한 지출액의 상호교차항을 포함하였을 경우에도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

이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 주도의 청년과 관련한 정책 지출의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발견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많은 지역일수록 청년과 관련한 정부 주도의 지출액이 청년인구 비율(%)을 보다 크게 증가시켰으며 민원에서 표출되는 감정 역시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켰다. 인구 대비 청년과 관련한 민원 수 또한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들은 모두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었다.

본 논문에서 발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와 기여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논문은 우리나라 청년인구의 지역 간 이동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청년인구 이동과 관련한 기존 문헌에 기여하고 있다. 청년인구 이동 혹은 보다 포괄적으로 인구 이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일자리 그리고 의료 및 교육 인프라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했다. 비록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청년들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차원의 변수가 발휘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되지 않았던 기업시민 가치구현의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이동에 대한 설명력을 증진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국가 수준에서 발휘할 수 있는 순기능을 실증적으로 발견함으로써 기업시민 가치구현에 대한 선행 연구에 기여한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영향력을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태도와 같은 기업 차원 혹은 조직몰입과 관련한 기업 구성원의 차원에서 연구해왔다(배수현, 2020; 윤각 & 서상희, 2003; 최운열 외., 2009). 본 연구는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국가 차원의 문제인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앞서 서술한 학문적 기여 이외에도 우리나라 지역공동화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역공동화와 청년인구 유출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 국가와 기업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발견은 단순히 국가 주도의 접근방식이 아닌 지역 청년들의 삶과 보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의 기업시민 가치구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상호교차항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과 해당 지역 사회공헌활동 간의 연결성을 보다 증진해야 할 것이다.

상술한 본 연구의 잠재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은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인구의 유동성과 지역 정착에 미치는 영향력을 통계분석에 의존하여 분석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업시민 가치구현과 청년인구 비율의 변화, 민원에서 표출된 감정, 그리고 인구 대비 민원의 수가 가지고 있는 상관관계만을 검증할 뿐, 각 관계성을 설명하는 이론 자체를 검증하지는 못한다. 이는 여타의 통계분석 접근방법을 활용하고 있는 연구들이 내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다 (Lieberman, 2005; Weaver-Hightower, 2014).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청년인구의 지역정착과 지역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가장 먼저, 본 연구의 통계분석 결과에 의거하여 인터뷰와 사례분석 등과 같은 질적연구를 통해 어떠한 메커니즘(Mechanism)에 기반하여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지역 청년들을 유입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시민 가치구현이 정부의 청년 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증진하는지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지역공동화와 지역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유미. (2022). 기초자치단체 청년 정책지향의 청년 이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5, 25-53.
- 기윤환. (2022).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시를 중심으로. LHI 저널, 13(4), 13-26.
- 김대원, 한기선, & 이태민. (2022).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기업규모와 제품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산업과경영, 35(2), 79-116.
- 김동현, 김태영, 김효정, & 문유진. (2022). 신경망 모델을 활용한 한국어 감성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0(1), 7-8.
- 김리영. (2019). 지역 간 특성차이가 서울시 청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역연구, 35(2), 49-57.
- 김리영, & 양광식. (2013).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1-19.
- 김성표, 박훈진, 나영우, & 최병길. (2015).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인원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333-334.
- 김소애, 서영원, 우경숙, & 신영전. (2019). 국내 미충족 의료 현황 및 영향요인 연구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비판사회정책(62), 53-92.
- 김양환, & 임준형. (2022). 사회적 가치 인식이 공무원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공봉사동기와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4(4), 559-579.
- 김용국, & 손용훈. (2012). 도시계획체제와 연계한 그린 인프라 적용 사례연구: 영국 그린 인프라 계획 및 정책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7(5), 69-86.
- 김용식, & 김경신. (2020). 직장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특성이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공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지역사회연구, 115-144.
- 김용현. (2016).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정부 복지정책의 진화 청년정책, 선도적 지방복지정책인가 아니면 정치적 포퓰리즘인가? 열린총남, 75, 51-55.
- 김형구, & 최중윤. (20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회계정보연구, 29(2), 83-102.
- 김화연, & 이대웅. (202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년세대의 지방 정주 의사 영향요인 연구-청년정책과 생활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4(2), 261-288.
- 박상록, & 박현숙. (2013).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통한 이미지 형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6(4), 961-985.
- 박원우, 마성혁, 배수현, 지선영, 이유우, & 김자영. (2020). 설문조사에서 불성실 응답의 탐지방법과 제거의 효과. 경영학연구, 49(2), 331-364.
- 박주섭, & 이새미. (2020). LDA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부산시 민원 빅데이터 분석. 정보화정책, 27(2), 66-83.
- 배성호, & 신수진. (2020).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책임과 차이: 개념 및 측정방법의 관점에서.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553-569.
- 배수현. (2020). 금융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전산회계연구, 18(1), 113-129.
- 배준구. (2006). 국가균형발전 관련제도 및 정책에 대한 재정감: 프랑스의 균형발전정책과 시사점. 지방재정, 2006(4), 47-69.
- 손지은. (2020).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조직학회보, 17(1), 123-147.
- 신자은. (2013). 건강보험 가입 재가 장애인인 미충족 의료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3(2), 525-577.
- 신종범, 윤용, 선화, & 김현덕. (2022). 우리나라 컨테이너터미널의 ESG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e-비즈니스연구, 23(3), 291-307.
- 오민지, & 안선민. (2022). 인구·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고용거버넌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4(1), 53-74.
- 유정규. (2021). 의성군의 지역재생전략과 청년유치·지원정책. 국토, 35-43.
- 유태균, 이재원, 서재호, 배지윤, 김다희, & 유키태. (2021). 신종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의 실태와 쟁점: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고찰. 노동정책연구, 143-172.
- 윤각, & 서상희. (2003).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기업광고가 기업이미지와 브랜드태도에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61), 47-72.
- 윤수인, 김중숙, 윤승태, & 이홍직. (202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13-25.
- 이명애. (2023). 지방소멸이 지역대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4(1), 595-615.
- 이소영. (2023). 2023년 인구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023(1), 63-76.
- 이원우, & 하홍열. (2022). 인터넷쇼핑몰 환경에서 기업의 사회적책임활동과 소비태도의 관계에서 기업이미지, 브랜드충성도 조절효과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53-87.
- 이종원, & 박철. (2020).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도와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49(4), 913-937.
- 이찬영. (2018). 연령대별 인구유출입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31(2), 707-729.
- 이찬영, & 문제철. (2016). 광주·전남 지역의 연령별 이동지역별 인구이동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9(6), 2239-2266.
- 임명진, 박원호, & 신주현. (2020). Word2Vec 과 LSTM 을 활용한 이별 가사 감정 분류. 스마트미디어저널, 9(3), 90-97.
- 임태경. (2023). 인구감소시대 혁신도시 개발정책의 인구 분산효과에 대한 논의: 수도권·비수도권 같은권역내 청년인구 순유입효과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6(4), 235-259.
- 정수철, & 조영복. (2020). 제조업의 CSR 활동이 조직신뢰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8(9).
- 정주호, & 조민호. (2018). 청년고용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공공기관 청년인턴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9(2), 57-81.
- 정희수, & 조상미. (2021). 한국 사회적기업의 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14(1), 207-245.
- 최운열, 이호선, & 홍현선. (2009).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기부금지출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38(2), 407-432.
- 최재호. (2014). 기업과 사회적기업 연계 사례 및 활성화 연구: 현대차그룹, SK 그룹 중심으로.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7(1), 117-149.
- 최해욱. (2016). 환경·위생분야 민원분석을 통한 정책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환경정책, 24(2), 45-57.
- 최형재. (2022). 지역의 사회·문화 여건이 대졸자들의 지역이동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22(2), 97-125.

- 허만형. (2021). 광역자치단체의 청년실업 영향요인 분석: 청년지원 프로그램 도입의 실효성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31(1), 23-49.
- 홍성호, & 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
- 황종남. (2017). 소득 수준에 따른 미충족 의료: 형평성의 함의.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4(4), 83-97.
- Alin, A. (2010). Multicollinearity.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computational statistics, 2(3), 370-374.
- Allison, P. (2012). When can you safely ignore multicollinearity. Statistical horizons, 5(1), 1-2.
- Bae, Y., Woo, B.-D., Jung, S., Lee, E., Lee, J., Lee, M., & Park, H. (2023).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esponse Speed and Sentiments of Public Complaints: Empirical Evidence From Big Data on Public Complaints in South Korea. Sage open, 13(2), 21582440231168048.
- Bell, A., & Jones, K. (2015). Explaining fixed effects: Random effects modeling of time-series cross-sectional and panel data. Political Science Research and Methods, 3(1), 133-153.
- Davies, A. (2008). Declining youth in-migration in rural Western Australia: the role of perceptions of rural employment and lifestyle opportunities. Geographical Research, 46(2), 162-171.
- Fearon, J. D., & Latin, D. D. (2008). Integrat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In J. M. Box-Steffensmeier, H. E. Brady, & D. Collier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Methodology (pp. 756-778). Oxford University Press. <http://dx.doi.org/10.1093/oxfordhb/9780199286546.001.0001>
- Jamil, M. L., Pais, S., Cordeiro, J., & Dias, G. (2022). Detection of extreme sentiments on social networks with BERT. Social Network Analysis and Mining, 12(1), 55.
- Jarmusevica, V., Ilisko, D., Badjanova, J., Jukšs, V., & Petrova, M. (2019). Educating citizens for implementing the strategy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the case study. EDULEARN19 Proceedings,
- Kharashvili, E., Chavleishvili, M., Lobzhanidze, M., Dameria, N., & Sagareishvili, N. (2017). Problems of youth employment in agricultural sector of Georgia and causes of mi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Behavioral, Educational, Economic, Business and Industrial Engineering, 11(10), 2116-2121.
- Krykun, V., Nanavov, A., & Pryiatelchuk, O. (2017). IMPLEMENTING BUSINESS SOCIAL RESPONSIBILITY IN UKRAINE: COMPANIES'CASES AND STATE ASSISTANCE. Baltic Journal of Economic Studies, 3(5), 229-237.
- Lee, J., Woo, B.-D., Lee, M., & Park, S.-y. (2022). Analyzing the Discourse of Hatred and its Relationship with Policymaking Process using Topic Modeling and Logistic Reg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4(5), 1989-2007.
- Lieberman, E. S. (2005). Nested Analysis as a Mixed-Method Strategy for Comparative Researc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3), 435-452.
- Mahendran, M., Speechley, K. N., & Widjaja, E. (2017). Systematic review of unmet healthcare needs in patients with epilepsy. Epilepsy & Behavior, 75, 102-109.
- Moulali, S. (2019). The Rol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Youth Development in Nellore District. Journal of Advances and Scholarly Researches in Allied Education, 16(4), 259-262.
- Uduji, J. I., Okolo-Obasi, E. N., & Asongu, S. A. (2019). Does CSR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ural young people in cultural tourism of sub-Saharan Africa? Evidence from the Niger Delta in Nigeria.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17(6), 725-757.
- Uduji, J. I., & Okolo-Obasi, E. N. (201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Nigeria and rural youths in sustainable traditional industries livelihood in oil producing communiti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31(7), 658-678.
- Weaver-Hightower, M. B. (2014). A mixed methods approach for identifying influence on public policy. Journal of Mixed Methods Research, 8(2), 115-138.
- Woo, B.-D., & Bae, Y. (2023). An Analysis on the Driving Factors of Population Changes in Local Provinces: Clues from News Big Data Analytics and Evidence from Empirical Analysis. 정보사회와 미디어, 24(1), 221-260.